

### 검찰, 김성태 쌍방을 전 회장 조사 시작

#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혐의 규명 방침

해외 도피 중 태국에서 체포돼 자진귀국 의사를 밝힌 김성태 쌍방을 그룹 전 회장이 17일 오전 10시46분께 호송차를 타고 검찰에 압송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상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그가 받고 있는 각종 혐의와 의혹을 규명할 방침이다.

1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가 이날 김 전 회장의 조사를 담당하고 있다. 형사6부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쌍방을 그룹의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를 담당해온 부서다.

김 전 회장은 현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다.

또 640만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해 북한에 건넸다는 대북송금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풀 핵심 인물이기도 하다.

김 전 회장은 수사가 본격화되기 직전인 지난해 5월 해외로 출국해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 8개월 만인 지난 10일 태국 빠툼타니 소재의 한 골프장에서 현지 이민국 검거팀에 의해 붙잡혔다. 양선길 현 쌍방을 그룹 회장도 현장에서 함께 잡혀왔다.

김 전 회장은 불법채류 혐의를 부인하며 현지에서 재판받을 예정이었으나, 돌연 마음을 바꿔 12일 자진귀국 의사를 밝혔다. 열악한 수용시설 환경과 주변 인물들이 출입이 구속되면서 부담을 느낀 것으로 분석된다.

이후 김 전 회장은 주태국 한국대사관에서 여행경증서를 발급받아 이날 0시50분 방콕에서 아시아나항공에 탑승, 오전 8시43분에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체포된 지 일주일 만이다.

검찰은 현지 파견된 검찰 수사관들을 통해 김 전 회장의 귀국 비행편에서부터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체포 영장을 집행한 뒤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만큼 검찰은 곧바로 김 전 회장을 수원지검으로 압송해 조사하고 있다.



해외 도피 중 태국에서 체포된 김성태 쌍방을 전 회장이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사진=공화신문기자단 제공)

### 쌍방을 그룹 각종 의혹 수사해온 형사6부서 조사 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할 듯... 발부 가능성 커

김 전 회장은 18일까지 김 전 회장의 구속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한 조사에 집중한 뒤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은 상당기간 해외 도피 생활을 해왔던 만큼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큰 상태다.

김 전 회장은 불법채류 혐의를 부인하며 현지에서 재판받을 예정이었으나, 돌연 마음을 바꿔 12일 자진귀국 의사를 밝혔다. 열악한 수용시설 환경과 주변 인물들이 출입이 구속되면서 부담을 느낀 것으로 분석된다.

이후 김 전 회장은 주태국 한국대사관에서 여행경증서를 발급받아 이날 0시50분 방콕에서 아시아나항공에 탑승, 오전 8시43분에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체포된 지 일주일 만이다.

검찰은 현지 파견된 검찰 수사관들을 통해 김 전 회장의 귀국 비행편에서부터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체포 영장을 집행한 뒤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만큼 검찰은 곧바로 김 전 회장을 수원지검으로 압송해 조사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18일까지 김 전 회장의 구속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한 조사에 집중한 뒤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은 상당기간 해외 도피 생활을 해왔던 만큼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큰 상태다.

김 전 회장은 불법채류 혐의를 부인하며 현지에서 재판받을 예정이었으나, 돌연 마음을 바꿔 12일 자진귀국 의사를 밝혔다. 열악한 수용시설 환경과 주변 인물들이 출입이 구속되면서 부담을 느낀 것으로 분석된다.

이후 김 전 회장은 주태국 한국대사관에서 여행경증서를 발급받아 이날 0시50분 방콕에서 아시아나항공에 탑승, 오전 8시43분에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체포된 지 일주일 만이다.

검찰은 현지 파견된 검찰 수사관들을 통해 김 전 회장의 귀국 비행편에서부터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체포 영장을 집행한 뒤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만큼 검찰은 곧바로 김 전 회장을 수원지검으로 압송해 조사하고 있다.

수십 명을 동원해 640만 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해 북한에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전 회장은 18일까지 김 전 회장의 구속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한 조사에 집중한 뒤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은 상당기간 해외 도피 생활을 해왔던 만큼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큰 상태다.

김 전 회장은 불법채류 혐의를 부인하며 현지에서 재판받을 예정이었으나, 돌연 마음을 바꿔 12일 자진귀국 의사를 밝혔다. 열악한 수용시설 환경과 주변 인물들이 출입이 구속되면서 부담을 느낀 것으로 분석된다.

이후 김 전 회장은 주태국 한국대사관에서 여행경증서를 발급받아 이날 0시50분 방콕에서 아시아나항공에 탑승, 오전 8시43분에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체포된 지 일주일 만이다.

검찰은 현지 파견된 검찰 수사관들을 통해 김 전 회장의 귀국 비행편에서부터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체포 영장을 집행한 뒤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만큼 검찰은 곧바로 김 전 회장을 수원지검으로 압송해 조사하고 있다.

도움을 준 대가로 쌍방을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받을 예정이다.

그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을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허위급여, 법인차량 등 3억2000만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그중 2억6000만원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규명 역시 주목되는 부분이다.

김 전 회장은 검찰이 1년 넘게 수사 중인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핵심 인물로, 범조계와 정치권 인파에서는 그의 귀국으로 이번 수사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맡았던 2018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에게 김 전 회장이 쌍방을 그룹 정권사태 등을 통해 거액의 수입료를 대납했다는 내용이다.

이 의혹은 2021년 민주당의 대선 경선 과정에서 제기됐는데, 같은 해 10월 '깨어있는 시민연대'가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당시 당 측은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을 당시 변호사비로 3억원을 썼다고 밝힌 것과 달리, 실제로는 특정 변호사에게 현금과 상장사 주식 등 20여억원을 썼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9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이 대표를 불기소했지만, 이유가 담긴 결정서에는 변호사비가 대납됐을 가능성을 남겼다.

다만 김 전 회장은 자신을 둘러싼 각종 혐의에 대해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인천공항에 도착해 이 대표와의 관계를 묻는 취재자에게 "모른다"고 선을 그었다.

이해 해외도피 이유, 대북 송금 이유 등을 묻자 "정말 저 때문에 저희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것이 죄송하다"면서 "김 전 회장이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18일까지 김 전 회장의 구속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한 조사에 집중한 뒤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 민주 윤준병 의원

### 지역구 의정보고회 열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17일 정읍시 예술회관에서 개최한 정읍시 의정보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의정보고회에는 이화수 정읍시장과 고경운 정읍시의회의장, 전북도의원·시의원, 주요 당직자, 당원 정읍시민 등 800여명이 참석했다.

보고회에서 윤 의원은 당선 이후 3년간의 의정 활동과 성과에 대한 보고 및 정읍의 미래 비전을 담은 새해 의정 방향을 지역 시민들에게 상세하게 전달했다.

윤준병 의원은 "곳은 낯에도 많은 시민 여러분들께서 참석하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며, "앞으로 농산어촌 공간의 재구조화 및 재생 산업단지의 재생프로젝트, 태양광·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통한 지역산업의 육성, 사계절 체류형 관광산업 육성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 등을 정읍시민의 새로운 먹거리 미래로 생각한다. 정읍시민 여러분과 지혜를 모아 정읍의 10년, 20년, 30년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14일 고창 동리국악당에서 고창군 의정보고회를 열고 당선 이후 3년간의 의정활동에 대해 군민들에게 알렸다.

/정읍=김대환 기자·고창=김영식 기자

### “전주시민들의 진심 반드시 보답하겠다”

### 김호서 재선거 예비후보 호천사거리서 지지 호소



오는 4월 치러지는 전주시 국회의원 재선거에 나선 김호서 예비후보(무소속)가 출근길 거리 인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17일 김 예비후보에 따르면 전날 오전 영하의 날씨 속에 전주 호천사거리에서 더 좋은 변화, 행복한 전주를, 기분좋은 선택!이라는 피켓을 들고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에게 인사했다.

오전 7시부터 두 시간 동안 진행된 출근길 거리 인사는 바쁜 출근길에도 김호서 후보를 알아 본 일부 시민들이 손을 흔들어 주거나 가볍게 자동차 경적을 울리며 응원을 보내기도 했다.

아침 인사를 마친 김호서 예비후보는 "출근길 인사는 주민들과 함께 하투를 시작하고 소통하는 생활 정치의 첫걸음"이라며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 더 좋은 변화가 있는 전주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들의 진심이 담긴 응원속에 출근길 거리인사를 진행할 수 있다"며 시민들의 진심을 마음에 새겨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후보는 "일도 해본 사람이 더 잘 한다"고 말하며 "선 도의원 도의회 행정위원장, 도의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주시장이 자랑스러워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이번 재선거에서 승리하여 자랑스러운 전주를 만들어 내야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호서 예비후보는 후보 연설이나 후보 광고도 할 수 없는 제한된 상황에서 출근길 거리 인사를 통해 얼굴을 알리고 대민 접촉을 강화하는 등 계속 출근길 아침 인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손 씻기·마스크 착용  
개인방역수칙 준수해주세요



전북도의회 박용근 의원은 17일 전북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새로운 전북특별자치도 추진 전략과 지역소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 전북특별자치도 추진 전략 지역소멸 대응방안 논의

### 박용근 도의원, 정책세미나 개최... '특례정책 발굴 등 최선'

전북도의회 박용근 의원은 17일 전북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새로운 전북특별자치도 추진 전략과 지역소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박용근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를

성공적으로 완성하고 내실 있는 특례 정책을 추진해 새로운 전부를 만들어야 한다"며 "전북형 특례정책 발굴과 전북특별자치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17일 정부 전자 관보에 공식 공포되어 128년 동안 사용해 온 '전라북도'라는 명칭은 내년 1월 18일부터 '전북특별자치도'로 바뀐다.

/김재훈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 “20년 넘게 배운 것들 전주에서 보답할 것”

### 황현선 민주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총선 도전 의사 전주병 출마 관련 “아직 확정적으로 밝힐 때 아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을 지낸 황현선(55)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이 내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 의사를 내비쳤다.

황 부위원장은 17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방문해 “전주시장 비서를 시작으로 전주에서 정치를 시작했고 정권교체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중앙당에 올라왔다. 2017년 중앙당 전략기획국장, 청와대 등에서 일하며 제 스스로는 지금도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발언을 열었다.

그러면서 “참모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20년 넘게 배웠고 활동했던 것들을 지역에서 보답하기 위해 전주에 왔다”고 내년 총선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전주병 지역구 출마 여부에 대해



황현선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이 17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내년 22대 총선 출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황 부위원장은 “정치인들이 너무나 정치 현안 등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있다”면서 “저 황현선은 전주에서 전주를 정치를 시작했고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 한다. 열심히 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황 부위원장은 전북대학교 상과대학 행정학과 출신으로 전주시장 비서, 무주군 비서관을 거쳐 민주당 전략기획국장,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조국 전 민정수석 보좌관)을 역임했다.

/뉴시스

### 검·경·선관위, 조합장 선거·전주를 재선거 대책회의

전주지검은 3월과 4월에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전주시의회 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전북선관위와 전북경찰청 등과 함께 유관기관과

서는 “전주에서 해보겠다는 것이지만 완전히 병지역구는 아니며 아직 확정적으로 밝힐 때는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황 부위원장은 “여러 가지 정치 상황 등을 볼 때 이제 전북 정치가 변해야겠다는 마음”이라며 “연초 많은 분들을 찾아 받고 좋은 말씀을 들으며 가장 적합한 것을 찾아서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황 부위원장은 이어 “정치인들이 너무나 정치 현안 등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있다”면서 “저 황현선은 전주에서 전주를 정치를 시작했고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 한다. 열심히 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황 부위원장은 전북대학교 상과대학 행정학과 출신으로 전주시장 비서, 무주군 비서관을 거쳐 민주당 전략기획국장,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조국 전 민정수석 보좌관)을 역임했다.

전주지검은 3월과 4월에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전주시의회 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전북선관위와 전북경찰청 등과 함께 유관기관과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전주지검 총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사건 등 최근 선거사법 사례를 분석하고 조

합장 선거 실시 지역 상황과 전주시의회 의원 재선거 상황을 공유했다.

특히 금품 수수, 흑색 선전 조합 임직원과 공무원의 불법 개입 등 3대 중점 범죄에 대해 각 기관의 역할을 집중해 엄정대응 하기로 했다.

/뉴시스